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한우암소감축 장려금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140개 시·군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점검 결과

기획 정보

OECD,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8대 정책과제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월 생산자물가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 농림수산물분야 재정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한우암소감축 장려금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 본 자료는 2월 6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한우 사육두수 연착륙을 위한 암소 감축 시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사업의 의의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은 한우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 과잉인 한우사육두수를 연착륙하여 소 값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예산액('12년도): 300억원
 - 두당 감축 장려금: (경산우) 30만원, (미경산우) 50만원

□ 감축 대상

- 외모심사결과 **한우로서 부적합** 또는 등급판정 결과 도체등급 2등급 이하 거세 수소를 낳은 암소 등 **저능력우**와 송아지를 한 번도 생산하지 않은 암소(**미경산우**) 및 송아지를 두 번까지 생산한 젊은 암소(**경산우**)로서 체중 또는 체격이 작은 암소를 대상으로 감축을 실시할 계획
 - (저능력우)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 코가 검은 암소 또는 도체등급 판정결과 2등급 이하의 거세수소를 분만한 적이 있는 암소 중 **60개월령 이내('12.1.31일 기준)로 '12년 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
 - ※ 대상마리수: 13,941마리(이모색 1,404, 흑비경 7,851, 2등급 이하 4,686)
 - (미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 시 **12~18개월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암소로서, **'12년 말까지 24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
 - ※ 다만,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3년 말까지 출하 가능한 암소

- (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 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 기록이 있는 암소로서, **'12년 말까지 45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

□ 감축 우선순위

-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는데 **외모심사와 유전능력평가** 결과 등에 의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계획
 -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이모색**) 코가 검은 암소(**흑비경**), 그리고 도체등급판정 결과 **후대축에서 2등급 이하 출현 거세 수소의 어미소**
 - ※ 외모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서 감축대상에 포함된 암소는 의무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감축을 실시
 -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 시·군·구별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 에서 선정한 저체중 암소

□ 농가 선정순위

- 농가별 몰량 배정기준은 그동안 한우암소 자율도태, 가축개량 등 정부 정책에 참여·기여한 수준을 고려하여 배정

<농가별 배정두수비율 및 배정상한두수 기준>

구분	배정 두수비율	배정 상한 두수
한우암소자율도태 농가	한우암소 사육두수의 25% 이내	7두
유전능력 평가 농가	20% 이내	5두
종축등록 농가	15% 이내	4두
한우사업단 농가	10% 이내	3두
부 이력번호 입력 농가	5% 이내	2두
최고기이력제 참여 농가	5% 이내	1두

※ 시도별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대상 배정 현황은 부록 참고
[부록]

<시도별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대상 배정 현황>

단위: 두, 천원

시도명	12~45개월령 어미소 개체수	배정 현황		비고 (배정두수 중 이모색, 흑비경, 2등급이하 출현 소)
		배정두수 *경산우 기준	배정금액	
서울특별시	20	2	600	1
부산광역시	1,071	102	30,600	4
대구광역시	5,032	478	143,400	33
인천광역시	3,753	356	106,800	29
광주광역시	2,516	239	71,700	7
대전광역시	2,261	215	64,500	18
울산광역시	12,586	1,196	358,800	83
경기도	73,195	6,956	2,086,800	1,057
강원도	72,499	6,890	2,067,000	1,180
충청북도	75,763	7,200	2,160,000	1,079
충청남도	164,972	15,678	4,703,400	3,623
전라북도	124,260	11,809	3,542,700	1,633
전라남도	189,187	17,979	5,393,700	1,148
경상북도	204,646	19,448	5,834,400	2,074
경상남도	110,097	10,463	3,138,900	1,880
제주도	10,407	989	296,700	92
계	1,052,265	100,000	30,000,000	13,941

※ 이모색: 1,404두, 흑비경: 7,851두, 2등급 이하: 4,686두

주요 농정 이슈_2

140개 시군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점검 결과

※ 본 자료는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140개 시·군 대상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조사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분야**(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31개 항목**(43개 세부기준)으로 구성
-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농어촌 서비스기준 8개 분야 31개 항목(43개 세부기준)의 달성정도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발표
 - ※ 읍면이 있는 시군: 군지역 86개, 도농복합시 52개(마산·창원 별도 조사), 제주시·서귀포시 2개
 - (자료 활용)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분야 31개 항목(43개 세부기준)에 대한 통계청 승인 공표통계, 각 부처 내부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

□ 조사 결과 총괄

- 전반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43개 세부기준 중 달성비율이 75% 이상이 23개, 50~75%는 7개, 25~50%는 3개, 0~25%는 8개로 파악
- **방과 후 학교 운영(103.4%), 하수도 보급(103.1%), 구급차 30분 내 도착**

(99.8%), **읍·면내 의약품 구입(99.6%), 시·군내 문화시설 운영(98.6%)** 등 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 높음.

※ 괄호 안 숫자는 목표대비 달성비율

- **마을회관·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6.3%), 평생교육시설 운영(18.9%), 인도설치(18.9%),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13.7%), 방범용 CCTV 설치(11%)** 등 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기준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예)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높은 하수도보급률(달성 73.2%, 목표 71%)의 경우, 창원시는 96.7%, 구례군은 88%로 높은 반면 영월군, 영양군, 울릉군 등은 1~3%로 낮은 수준
- 43개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경기 북동부·남부, 충청 북부, 전북 북부, 광역시 인근 지역**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가 높은 반면 **강원·경북·경남**은 상대적으로 낮음.

□ 분야별 조사 결과

- (주거 분야) 주택과 하수도 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높지만, **난방과 상수도 기준의 달성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 분야) 일부 오지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농어촌 마을에서 대중교통이 1일 3회 이상 운행되고 있으나, **안전보행을 위한 인도 설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분야)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비율은 높고, 120개 시·군에서 우수고등학교를 육성·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평생교육기관(비형식)**은 전국 1,409개 읍·면 중 267개 읍·면 (18.9%)에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
- (보건의료 분야) 대부분의 시·군에서 내과·한방과·치과·물리치료실의 이용이 가능하나 **산부인과가 부족**
 -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에 보건소 등 전문인력이 마을 순회방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월1회 이상 순회방문을 받는 행정리**는

전체 행정리의 0.2% 수준

- (복지 분야) 청소년·아동·다문화가족 기준의 달성정도는 양호하나, 노인·영유아 기준의 달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농어촌의 취약계층 노인(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81.7만 명 중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는 비중은 27.3%로 22.3만 명
- (응급 분야) 구급차·소방차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양호하나, 농축산물 절도 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의 설치 확대** 필요
- (문화 분야)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은 대부분 시군(138개)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서관의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상대적으로 미흡
- (정보통신 분야)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농어촌의 정보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도 농어촌 마을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률은 99.7%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실제 농어촌가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률(11)은 67.9%이고, IPTV를 볼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BcN) 가입률은 61.5%임.

거시경제 동향 정보

2012년 1월 생산자물가 동향

※ 본 자료는 지난 2월 9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요 내용

○ 2012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 전년동월대비 3.4% 상승

- 농림수산물: 축산물이 하락하였으나 채소류와 과일류가 오르면서 전월대비 0.5% 상승
- 공산품: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7% 상승
- 서비스: 금융서비스와 전문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9% 상승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1.10월	11월	12월	'12.1월	'11.10월	11월	12월	'12.1월
총 지 수	1000	0.0	-0.2	0.2	0.7	5.6	5.1	4.3	3.4
농 립 수 산 품	43.6	-5.2	2.0	4.4	0.5	-5.3	-0.8	-0.2	-8.0
곡	11.0	-0.6	4.2	0.9	0.7	21.3	17.9	16.7	15.8
채	7.4	-14.6	-6.9	5.9	10.7	-29.0	-20.5	-12.8	-14.4
과	5.3	-2.6	-0.5	8.2	11.1	-19.5	-20.5	-25.6	-19.6
축	12.0	-6.0	9.5	3.0	-9.8	5.1	13.9	14.0	-14.0
수	5.3	0.0	-1.0	-1.5	-1.2	1.5	-0.2	-4.2	-8.6
공 산 품	644.8	0.2	-0.5	-0.1	0.7	7.9	6.7	5.3	4.7
음	52.8	0.6	0.7	0.2	0.1	6.6	7.4	7.1	6.6
석	59.7	1.3	0.0	0.6	2.0	23.5	21.9	16.9	14.6
화	55.2	-0.3	-2.9	-1.4	2.6	15.8	8.8	4.9	4.3
1차	65.6	-1.3	-0.8	-0.3	0.3	6.0	4.3	2.4	1.6
전 력·수 도·가 스	44.5	2.5	-0.4	2.6	0.1	7.4	9.2	12.0	10.2
서 비 스	264.4	0.3	-0.2	-0.1	0.9	1.5	1.2	1.1	1.3
금	27.4	0.7	-1.8	-0.2	2.2	-0.8	-3.2	-4.1	-3.8
부	42.3	0.0	0.2	0.1	0.4	0.8	1.0	1.0	1.2
전	43.3	0.0	-0.1	0.0	1.9	2.7	2.6	2.4	3.6
문	31.1	0.2	-0.1	-0.1	1.4	3.2	3.1	3.2	2.9
서									
기									

○ 특수분류별 생산자 물가 지수

- 식료품은 전월대비 0.4% 상승,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8.5% 상승
- 에너지는 전월대비 1.0% 상승, IT는 전월대비 0.1% 상승
- 한편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는 전월대비 0.4% 상승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1.10월	11월	12월	'12.1월	'11.10월	11월	12월	'12.1월
식 료 품	81.3	-2.5	1.3	1.6	0.4	0.0	3.0	2.8	-1.8
식 료 품 이 외	918.7	0.3	-0.4	0.2	0.7	6.1	5.3	4.5	4.0
신 선 식 품	16.4	-8.5	-3.9	4.9	8.5	-25.0	-20.5	-19.4	-19.0
신 선 식 품 이 외	983.6	0.2	-0.2	0.2	0.6	6.4	5.6	4.8	4.0
에 너 지	93.8	2.3	0.0	1.2	1.0	16.9	17.5	16.1	13.0
에 너 지 이 외	906.2	-0.3	-0.3	0.2	0.7	4.2	3.5	2.8	2.2
I T	175.1	-0.2	-0.4	-0.1	0.1	-1.2	-1.3	-1.7	-2.1
I T 이 외	824.9	0.1	-0.2	0.3	0.8	6.6	6.0	5.2	4.2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0.1	-0.3	0.1	0.4	5.0	4.1	3.4	2.8

※ 본 자료는 2월 6일 OECD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12년 8대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개요

- OECD는 최근의 국가부채위기 극복과 정부재정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구조와 신뢰가능하고 **명확한 통합계획(consolidation plan)의 필요성**을 강조
- “2012년은 2011년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여성고용, 녹색성장 등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

참고: “2012년 다보스포럼의 6대 도전 과제”

- ① 글로벌 경기 침체
- ② 글로벌 경제적, 정치적 파워 시프트에 따른 지역 패권주의 부상
- ③ 실업문제 가중
- ④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와 공공기관의 불신 증가
- ⑤ 천연자원의 희소성과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
- ⑥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따른 사이버 범죄 급증

□ 2012년 8대 실천적 정책행동

1. 구조개혁 추진 (Go structural)

- 교육, 보건, 노동시장, 경쟁, 조세, 녹색성장, 혁신 등에 초점을 두고 구조개혁 추진
 - 상품시장에서 **성장의 새로운 원천**을 찾아내고 관련된 구조개혁 필요

-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에너지산업에서도 경쟁이 촉진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투자와 일자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 혁신은 성장의 주요원천이며 **실천적인 혁신정책**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가능

- 새로운 창업기업, 혁신적 연구조사, 역동적인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지식기반 성장으로 경제 재가동 필요
-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업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필요로 하고, 저탄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필요

2.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 (Go social)

- 인간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은 이번 위기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로서 **불평등의 증가와 중산층의 불만**은 **경제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음.
-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의 해결, 청년층에 대한 더 많은 고려, 사회통합과 생활수준을 저해하는 불평등의 감소 등 **시급한 3가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 필요**

3. 경제적 불평등 해소 (Fighting inequality)

-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국가에서의 불평등 증가로 중산층 후생 위협
 - 국가에서 **조세와 복지시스템, 소득재분배 기능의 미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기회와 포섭을 최대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작동이 제대로 되어야 함.**
 - 정부는 조세와 정부지출 전략을 결정함에 있어 가정과 아동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

4.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능력 배양 (Empowering women)

○ 여성의 역할은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모두 중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서는 각 국가 경제의 잠재적 성장점에 도달하기 어려움.
-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교육시스템에서의 기회균등, 임시근로자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자리로 불러내야 함.

5. 녹색성장 실현 (Greening growth)

- 오늘날 웰빙은 더 이상 경제성장과 오염되지 않은 지구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두 가지(녹색과 성장) 모두를 달성하는 것이어야 함.
-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면서도 글로벌 환경도전을 해결해야 함.

6. 질적 성장 고려 (Considering progress)

- 더 이상 국가의 GDP가 국가발전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
- GDP가 측정 못하는 시민들의 삶, 요구, 열정과 감정 등을 담은 웰빙(Well-Being)지표 개발을 통해 국가간 질적성장 수준을 비교가능하게 하여 기존 GDP 위주의 국가정책 보완

7. 개발의 효과성 향상 (Towards development effectiveness)

- 지구상에 식량, 물, 위생, 에너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10억 명 이상 있음. 따라서 선진국의 지식을 후진국과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개발정책의 결과를 향상시켜야 함.

8.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New global governance)

- 정책지도자들이 현재의 경제위기가 제공해 주는 교훈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을 이끌어내야 함.
 - 2012년에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열린 기회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
 - 새로운 국가 리더십은 각국 정부를 향한 기대와 희망의 시각에 부응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 OECD 및 다보스포럼의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동향 비교는 부록 참고

[부록]

<OECD 및 다보스포럼의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동향 비교>

OECD	다보스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보건, 노동, 경쟁, 조세, 녹색성장, 혁신에 초점을 둔 구조개혁 추진 ○ 3가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실업문제 해결, 청년층에 대한 높은 관심, 불평등의 감소) ○ 경제적 불평등 해소 ○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능력 개발 ○ 녹색성장 실현 ○ 웰빙 지표 개발을 통해 국가간 질적성장 수준을 비교가능하게 하여 기존 GDP 위주의 국가정책 보완 ○ 개발 정책의 효율성 향상 ○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 고용 모델(Growth and Employment Models): 부채를 통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고용에 기반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 필요 ○ 리더십과 혁신모델(Leadership and Innovation Models): 신흥국들은 국제적 정치·경제 이슈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 ○ 지속가능성과 자원모델(Sustainability and Resource Models): 제한된 자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필요 ○ 사회·기술적 모델(Social and Technological Models):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기술 혁신 모델로의 전환 필요

기획 정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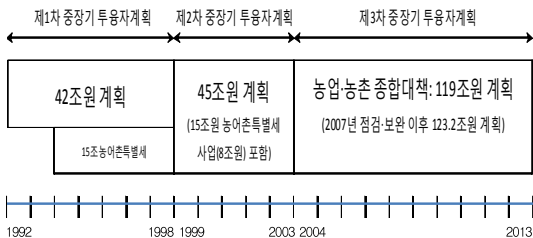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 본 자료는 지난 2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의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문제의식

-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방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199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실시

<중장기 투융자계획 비교>



- 이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량의 일정 비중 이상을 담당시키고자 하였으나, 농산물가격 정체와 생산비 증가로 목표 달성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
- 영농규모화를 통한 구조조정 방향 및 생산기반정비에 편중된 재원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자원배분의 특징과 결과

- (제1차 및 제2차 중장기 투융자계획) **생산기반정비에 대한 투입 비중**이 다른 분야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큼**(제1차 29.9%, 제2차 34.1%).
- (제3차 중장기 투융자계획) '소득 및 경영안정'에 두고 '**생산기반정비를 축소**할 계획'
 - 그러나 2007년말 이루어진 '조정·보완'과정에서 '**경영 및 소득안정**'의 비중이 **축소**(28.5%→24.3%)되고, '시설장비 현대화지원'과 '**생산기반정비**'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64.3%→66.9%)
- **쌀에 대한 투입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쌀에 대한 편중된 지원으로 인해 과잉생산 초래 및 재고량 누적 야기
→ 쌀생산을 억제할 목적으로 **쌀생산조정제 실시**

□ 제3차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주요 정책과 성과

- 제3차 중장기 투융자계획(03~13년)은 농업·소득·농촌정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수립되었으나, 당초 수립하였던 주요 정책목표는 달성 미흡
 - ('13년까지 **6ha 수준 쌀전업농 7만호 육성**) 달성 가능성 희박
 - ※ '13년 3ha 및 5ha 이상의 농가호수 각각 56천호, 26천호 전망
 - ('13년까지 **직접지불제 예산비중 23% 및 농가소득 대비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 10% 달성**) 달성 가능성 희박
 - ※ '12년 직접지불제 예산비중 15.2%, 농가소득 중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 5.4%(10년)
 - ('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비중 10% 확대**) 초과 달성
 - ※ '10년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농업인증량 12%
 - ('10년까지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50%까지 달성**) 정책 목표 달성
 - ※ '07년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50%까지 달성
 - ('10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 1,000개 권역 개발 및 농촌 주민 만족도 49%까지 향상 목표**) 미흡

□ 농가소득 추이와 농업소득 정체의 원인

- 농가소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율 둔화, 그 원인은 **농업소득의 정체에서 기인**
 - ※ 농업소득(천 원): ('90년) 6,264 → ('00년) 10,897 → ('10년) 10,098
- 농업소득 정체의 원인
 - ※ **시설투자 확충**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는 **농업소득 정체의 원인으로 작용**
 - (수입측면)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의 생산량 증가로 **농가판매가격 횡보**
 - (비용측면) **자본생산성 확대 한계** 및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인한 **생산비 증가**

□ 개선과제

- 영농규모화의 구조조정방향 재검토 필요
 - 농산물가격 정체와 생산비 증가로 영농규모화 구조조정 방향은 목표달성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
- **재원배분 재검토 필요**
 -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 **경영 및 소득 안정강화** 부문으로 재원배분 재편 필요
- **생산요소를 감축하는 농업시스템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는 등 농업시스템 외부에서 유입되는 생산요소를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확대 모색(친환경농업 등)
- 농산물소비량 감소를 반영하여 **작목별 적정 재배면적 조정 필요**
 - 소득 작물의 재배면적이 자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산물가격 제고**
 - ※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 반영, R&D 확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보급 필요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지난 2월 6~10일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맹주위에 채소수급 비상...소비마저 '공공'

- 최근 계속된 한파로 수확일정에 차질, 채소 작황도 나빠지면서 오이·고추 등 과채류를 비롯 시금치·부추·쪽파·깻잎 등 주요 채소의 수확량 및 도매시장 반입량 크게 감소함. 반면 물량 감소폭만큼 채소값은 오르지 않고, 고유가 등으로 인해 농가 수익성 악화

자료: 농민신문(20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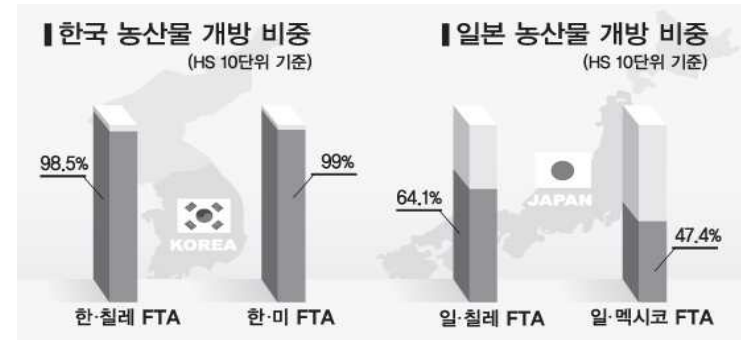
□ 안·중 FTA 국내절차 착수

- 정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절차 착수. 원활한 국내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5월 전 협상선언 가능할 것이라고 봄. 한·중 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규정에 따라 '관보 게재 요청→관보 게재→공청회 실시→FTA 민간자문회의 심의→FTA 추진위원회 심의→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공청회는 이달 24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

자료: 농민신문(2012.2.10).

□ 일본 "농산물 개방 축소와"

- 일본 정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상품관세 철폐율 80%, TPP 협상 제외 품목 20%에 주요 농산물 포함할 계획임. 이는 모든 관세를 없앤다는 TPP의 목표에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쌀과 유제품 등 주요 농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물 개방 비율 60%선 유지하고 있음.



자료: 농민신문(2012.2.10).

□ "쌀 통계 대수술...쟁악성 높아야"

- 최근 3년간의 쌀시장 '추가격리(과잉)'와 '비축쌀 방출(부족)'이란 정반대 상황 잇달아 연출. 농경연은 최근 '쌀 수급통계 개선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현행 쌀 통계의 문제점 제기; 품종·지역별 생산량 차이 표본에 반영, 품질 수요 늘어 현백률 현실화 필요, 소비량 조사를 독립적인 조사 체계 구축, 표본에 단독가구·외국인가구와 같은 특수가구를 포함시켜 정확도 향상 필요

자료: 농민신문(2012.2.8).

□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공략 '꼼수'

- 대형유통업체 지속적인 골목상권 공략.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신규 점포 개설이 어려워지자 기존 중소슈퍼마켓 사업자를 인수해 매장수를 늘리거나 편의점 같은 유사 업체에 진출함으로써 전략을 선회해 사업 확장을 진행함. 법적인 제한과 부정적인 여론을 피해 가면서 골목상권 공략.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

자료: 농민신문(2012.2.8).

□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대폭 강화

- 관세청,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물품의 불법 우회수입 급증우려에 따른 조치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2.1부터 시행)' 별도 훈령 마련함. 본 훈령을 바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전담반' 설치하여 FTA 체결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검증 대폭 강화할 계획임.

자료: 농민신문(2012.2.6).

연구 지원 정보

2012 농림수산물분야 재정 구조

※ 본 자료는 1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2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의 재정」의 내용 중 농림수산물위원회 부분을 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분야 재정 구조

- 2012년 농림수산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18조 758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
- 총지출 규모를 농림수산물위원회 소관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물부가 2011년 대비 3.7%증가한 15조 4,083억 원, 농촌진흥청이 8,724억 원(전년대비 20.1% 감소), 산림청이 1조 7,951억 원(전년대비 7.3% 증가)**
 - 예산: 12조 9,431억 원 (농수산물식품부 10조 2,757억 원, 산림청 1조 7,951억 원, 농진청 8,732억 원)
 - 기금: 5조 1,32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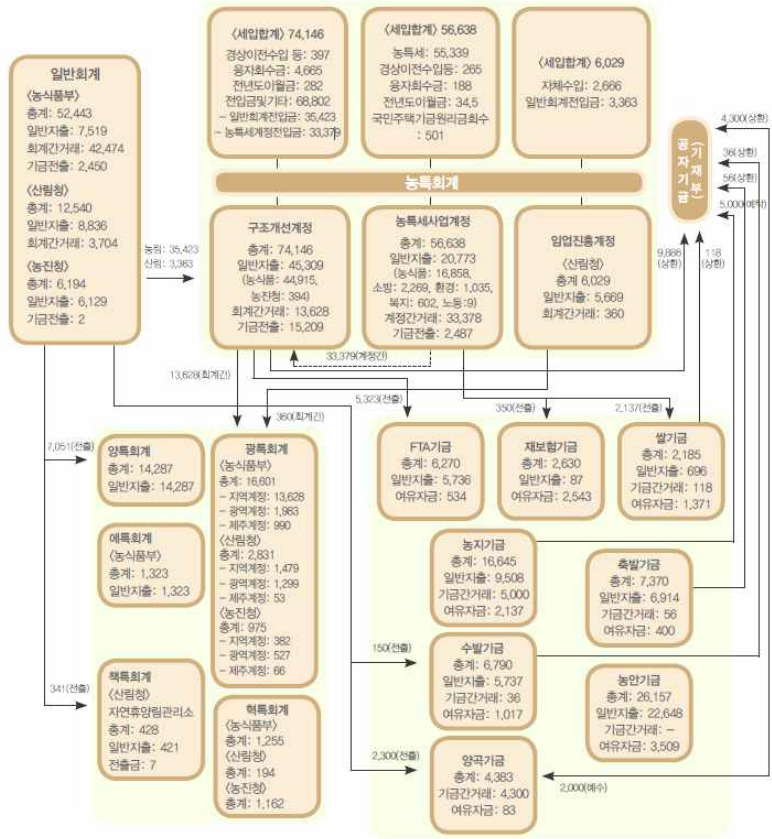
<2012년 농림수산물분야 재정 구조>

단위: 억 원, %, %p

구분	2011 (A)	2012 (B)	증가액 (B-A)	증가율 (B-A)/A
농림수산물위원회	176,303	180,758	4,455	2.5
총지출 대비 비중	5.7	5.6	-0.1	-
농림수산물식품부	148,644 (84.3)	154,083 (85.2)	5,439	3.7
농촌진흥청	10,917 (6.2)	8,724 (4.8)	-2,193	-20.1
산림청	16,742 (9.5)	17,951 (9.9)	1,209	7.2

- 주 1) 산림분야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복권기금을 제외
 2)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농림수산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
 3) 괄호 안은 농림수산물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

<2012년 농림수산물분야 부문별 재정 규모>



- 주 1) 일반회계의 농특회계 전입재원: 농수산물수입관세액+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부가가치세액(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6조)
- 2) 산림분야의 국유재산관리자금(451억 원)과 복권기금(211억 원)을 제외한 것임.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